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6
----------	-----

발의연월일 : 2007. 4. 9.

발 의 자 : 심준홍 · 박수범 ·
박희진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방향을 정립하고, 구(區)간 격차의 조기 해소를 위하여 도시균형발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구분 등 용어를 구체화함(안 제2조).

- 도시균형발전사업 : 자치구편익시설확충사업, 살기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 사업,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제반사업
- 자치구편익시설확충사업 : 구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주민복지·문화·교육·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구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게 하는 사업
-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 사업 : 각 도시·마을의 역사·문화·예술적 특성 등 환경과 생활을 되살리고 경제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마을공동체를 복원하여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

○ 도시재생사업 : 도시기능 및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나. 시장은 체계적인 도시균형발전시책 추진을 위하여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중기재정계획, 재정비촉진계획 등의 계획수립 및 변경 시 도시균형발전시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구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점적인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지역 중에서 도시균형발전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지정대상구역, 지정심의, 사업지정의 우선순위, 사업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바. 공공기관의 신설 또는 이전 시 그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분산·배치하고, 복지·문화·교육·운동시설 등의 확충은 지역별·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육감과 수시로 협의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구청장이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사업을 적극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추진의 전반적 사항을 행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의 이자 수익금, 그 밖에 차입금 및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내지 제3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지방재정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나. 예산조치 : 별도필요 없음

다. 기 타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2) 입법예고 : 없음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방향을 정립하고, 자치구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균형발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자치구편익시설확충사업,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 사업, 도시재생사업을 말한다.
2. “자치구편익시설확충사업”이라 함은 자치구간 불균형문제를 최소화하고 균형적인 복지·문화·교육·운동시설을 확충하여 자치구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인구감소율·재정상황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구역
 - 나.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구역
 - 다. 수자원 및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관광기능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기대되는 구역
 - 라. 그 밖에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3.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자치구의 정체성과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역사·문화·예술적 특성을 극대화·차별화하여 자치구의 정체성과 도시·마을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나. 자치구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창의적인 계획을 갖고 도시·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구역

다. 그 밖에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4. “도시재생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기능 및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 환경, 상업, 업무, 관광 및 숙박시설 등의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구역

나. 공공기관 및 주요 시설의 이전 등으로 도심의 기능이 쇠퇴하거나 경기침체 현상 등이 지속되고 있어 도심의 활성화가 필요한 구역

다. 도시환경정비가 필요한 구역

라. 그밖에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5. “사업지구”라 함은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라 함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는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2장 기본계획수립과 사업의 지정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도시균형발전시책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부합하여야 한다.

1. 도시균형발전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균형발전의 중장기 계획
3. 자치구간 불균형실태 조사·분석·평가
4.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
 - 가. 자치구 재정
 - 나. 주거환경정비
 - 다. 교육·문화체육·복지
 - 라. 산업·경제
 - 마. 그 밖의 기반시설 등
5. 다음 각 목의 도시균형발전사업의 개발 및 사업우선순위 선정
 - 가. 자치구편익시설확충사업
 - 나.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 사업
 - 다. 도시재생사업
6. 다음 각 목 중 도시균형발전사업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개발
 - 가. 교육환경개선사업
 - 나. 문화 및 복지 환경 개선사업
 - 다. 도심하천정비 및 복원 관련 사업
 - 라. 재래시장활성화사업
 - 마. 교통환경개선사업
 - 바.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도로사업
 - 사. 하수처리개선사업
 - 아. 그 밖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③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시책반영) ①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2.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
6.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
7.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제6조(사업의 지정) ①시장은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점적인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치구별 구역 중에서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도서(사업계획도 및 사업계획조서 등)와 사업계획설명서(기초조사서, 재원조달방안, 기반시설계획)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의 취지, 위치, 면적 및 규모 등 사업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대전광역시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작성한 사업계획도서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제안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제2항 관련 사업계획도서 및 사업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대상구역) 지정대상구역은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8조(사업의 지정 심의) 시장이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사업의 우선순위)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도시균형발전사업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2. 개발계획의 실현성과 적정성
3. 재원확보와 조달계획의 타당성
4. 자치구 및 주민의 추진의지
5. 자치구간, 생활권역별 형평성
6. 혐오시설 및 주민기피시설 설치 필요성
7. 기 추진 유관사업(계획)과의 연속성 등

제10조(사업 지정의 공고 등) ①시장은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전광역시공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공보 등”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당해 사업 관할 구청장에게 공고된 사항의 관련 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송부 받은 구청장은 이를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③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균형발전사업이 제12조 각 호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지정되는 사업과 중복 또는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지정의 효력 상실) ①제10조의 공고일 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도시균형발전사업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시장은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균형발전사업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때에는 이를 공보 등에 공고하고,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방식) 사업방식은 제1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되, 해당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제2호의 방식과 병행할 수 있다.

1.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사업
2. 그 밖에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

제1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정공고가 있는 때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주민사업설명회, 주민참여절차를 거쳐 수립된 주민의견서 내용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배치 등) ①시장은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에는 그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균형 있게 분산·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주차장, 공원 등을 확충함에 있어 시민들이 편익 및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장은 제4조제2항제6호가목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 (광역적 사업의 추진) 시장은 중복투자를 억제하고 통일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자치구 관할구역에 걸치는 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광역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지원 등

제16조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①도시균형발전사업 중에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 또는 자치구가 부담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기반시설은 그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를 균등 분배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도시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각종 사업시행에 관한 절차와 업무협의 등의 대행과 필요한 정보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기금

제18조(도시균형발전기금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1년까지로 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의 이자 수익금
3. 그 밖에 차입금 및 보조금 등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재원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요율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 출연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관할 도시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시의 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⑤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도시균형발전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2. 도시균형발전사업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기반시설

나. 시가지 및 가로시설물 정비·개선

다. 재래시장 현대화 및 편의시설 확충(공중화장실, 파고라, 쉼터시설 등)

라. 지구 교통개선사업(TIP)

마. 공공 문화·교육시설 및 복지시설(공연장, 전시장, 미술관, 평생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여성회관, 노인회관 등)

바. 특화상품 및 특화거리 육성사업

사. 그 밖에 시장 및 구청장이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방재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문화체육국장, 교통국장, 도시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된 자치구의 부구청장 및 관련분야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간사 및 서기) 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시균형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건설방재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도시균형개발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4장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제28조(설치) 시장은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정·변경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정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방식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배치 등에 관한 사항

6.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도 선정 및 사업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 소속 공무원 3인,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5인, 자치구 소속 공무원 5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 및 자치구 소속 업무관련 공무원
2.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5. 그 밖에 도시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③시장은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외의 위촉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시균형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3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시균형발전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이미 지정·고시한 지구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주민공람 및 관련위원회의 심의 등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및 당해 사업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도시균형발전사업 및 사업계획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0, 2005.3.31, 2006.1.11, 2007.1.19>

1. ~ 2. (생략)
3.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 5. (생략)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 9. (생략)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 19. (생략)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포함한 4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19>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제76조 내지 제78조와 「건축법」 제32조·제33조·제51조·제53조 및 제67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④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도지사에게 대한 자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②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자문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③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05.12.7>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

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주거지형 :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 중심지형 :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2. "재정비촉진사업"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3. ~ 7. (생략)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2 이상의 시·군

·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다만, 시·군·구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주택 수용계획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 나.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 가능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 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등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등의 주거대책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 자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광역적인 재정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법령에 의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⑤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분담기준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都市開發區域"이라 함은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第3條 및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區域을 말한다.
2. "都市開發事業"이라 함은 都市開發區域안에서 住居·商業·産業·流通·情報通信·生態·文化·保健 및 福祉 등의 機能을 가지는 團地 또는 市街地를 造成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사용하는 用語는 이 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法에서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2.2.4>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하는 者(이하 "指定權者"라 한다)는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都市開發區域에 대한 都市開發事業의 計劃(이하 "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指定權者는 직접 또는 第3條第3項第2號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요청을 받아 開發計劃을 변경할

수 있다.

③指定權者는 都市開發事業을 換地方式으로 施行하고자 하는 경우 開發計劃을 수립하는 때에는 換地方式이 적용되는 地域의 土地面積의 3分の 2 이상에 해당하는 土地所有者와 그 地域의 土地所有者 總數의 2分の 1 이상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開發計劃을 변경(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24>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

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 11. (생략)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7의2.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8.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9.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10.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1.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2.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건설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과 의하여야 한다.<개정2006.5.24>

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1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①법 제8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이라 함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주택법】

제8조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8>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8, 2005.7.13, 2007.1.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7.13, 2007.1.11>

⑥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시·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2005.1.8, 2005.7.13>

찬성의원서명

[illegible]